답 변 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김영도

1. 지난해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전문대학이 지역 혁신과 인재 양성 측면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라이즈사업의 성과를 논하기엔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대학과 지역이 소통하는 '문법'이 바뀌기 시작한 결정적 전환점임은 분명합니다.

- 지역 문제 해결의 '공동 협의체' 출발
  과거에는 대학과 지역이 각자의 길을 갔다면, 이제는 지자체와 지역 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논의의 시작점'이 마련되었습니다.
- 지역 현안의 '프로젝트화'와 현장 적용
  막연한 담론이 아니라, 학교마다 우리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를 과제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형 교육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의 강의실이 지역 사회의 실험실(Living Lab)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실전형 R&BD(Business Development, 실증기술개발)의 본격화
  지역 산업체와 단순히 인력을 주고받는 단계를 넘어, 기업이 당면한 기술적 난제를 대학과 함께 풀어나가는 실증 중심의 R&BD가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 '학위 중심'에서 '정주 중심'으로의 유학 패러다임 전환
  일반대학 유학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유학이라면, 전문대학은 졸업 후 지역 기업에 취업해 뿌리를 내리는 '정주형 유학'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역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질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 교육을 넘어선 '교육복지'로서의 평생직업교육
  지역민들이 재취업과 전직을 위해 대학을 찾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교육을 넘어, 중장년층이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차원의 사회복지'이자 성장 인프라입니다. 전문대학은 이제 지역 소멸을 막는 최후의 교육 복지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2. AI 기술 확산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전문대학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이며, 고등직업교육 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공포가 있지만, 전문대학은 오히려 AI를 활용해 '현장의 숙련도를 고도화'시키는 곳입니다.

- AI를 도구로 현장을 혁신하는 '실증적 해결 능력'
  전문대학의 경쟁력은 AI 기술 그 자체를 배우는 것을 넘어,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어떤 현장 문제에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실전적 능력에 있습니다. 이론 중심이 아닌, 실제 산업 현장의 과제를 프로젝트화하여 직접 풀어가는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통해 AI와 협업할 줄 아는 고숙련 마이스터를 양성합니다.

• 산업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유연성과 민첩성'
기술의 유효기간이 짧아지는 AI 시대에 전문대학은 산업계의 요구를 가장 빠르게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장과 긴밀히 연결된 R&BD 환경은 학생들이 졸업 후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게 만드는 전문대학만의 힘입니다.
• 전 생애 주기를 책임지는 '교육복지 및 성장 인프라'
AI로 인한 직업 구조 변화는 필연적으로 재취업과 전직의 수요를 낳습니다. 전문대학은 중장년층이 급변하는 기술에 적응하고 제2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평생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직업 훈련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적 자립을 돕는 고도의 '교육복지'이자 국가적 '성장 인프라'로서의 역할입니다.
• 정주형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소멸 저지선'
AI 산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산업 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AI 인재를 양성하여 그들이 지역에 정주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단순 학위가 아닌, 지역 산업 현장에서 AI 기술을 다루며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모델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지키겠습니다.

3. 최근 교육부가 9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전문대학과 지자체, 사립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대교협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연구와 현장 실증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지역 경제를 굴리는 두 개의 바퀴입니다. 어느 한 쪽이 주도권을 쥐는 구조는 균형을 깨뜨릴 뿐입니다.

• 수평적 파트너십의 전제: "보조가 아닌 주체"
거점 국립대가 연구(R&D)의 중심이라면, 전문대학은 그 기술을 현장에서 완성하는 실증(R&BD)의 중심입니다. 전문대학을 국립대의 하위 파트너로 배치하는 구조는 고등교육의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지역 산업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고등직업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수평적 협업 모델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슈퍼테크니션' 양성을 위한 독자적 트랙 확보
국립대의 학문적 연구가 실제 산업 현장의 부가가치로 이어지려면, 전문대학의 슈퍼테크니션들이 기술의 마침표를 찍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신규 사업 내에서도 전문대학이 맡은 고숙련 실무 인재 양성 및 실증형 R&BD 과제에 대해서는 국립대를 거치지 않는 독자적인 예산 집행과 사업 운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RISE 체계와의 일관성 유지 및 사업비의 배분의 재검토
이제 막 안착을 시도하는 RISE 체계의 핵심은 '지자체-대학-산업체'의 밀착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기존의 RISE 체계와 충돌하거나 전문대학의 역할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운영 구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1차년 사업에서 줄 세우기를 통해 사업비 차등이 너무 심하였다. 모든 대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 및 배분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 교육복지 차원의 형평성 있는 지원
교육은 삶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공공 서비스이기에, 국립대든 전문대학이든 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은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거점 국립대에 집중된 투자가 자칫 지역 내 다른 전문

대학들의 재정 악화로 이어져, 지역민들이 누려야 할 '교육복지'의 질이 저하되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점국입대 중신으로의 전환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보완입니다. 설계도(국립대)만 있고 집을 지을 기술자(전문대학)가 없는 공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에게도 합당한 권한과 지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4.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전문대학의 재정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한 해법을 제안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문대학의 재정 위기는 단순한 대학의 위기가 아닙니다. 지역의 '성장 인프라'가 무너지는 국가적 비상사태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전문대학의 재정난은 지역에서 슈퍼테크니션을 길러낼 토양을 메마르게 합니다. 전문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민의 삶을 지탱하는 교육복지의 보루입니다. 이곳이 흔들리면 지역 청년의 자립 기회가 사라지고 지역 소멸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해법 1]지역 거버넌스가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 거점으로 지정

이제 대학은 학령기 학생만을 기다려선 안 됩니다. 재취업과 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전 생애주기 평생직업교육 거점'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합니다. 이는 중장년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교육복지이자, 숙련된 인력을 산업 현장에 재공급하는 성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해법 2]「직업교육법」제정과 안정적 재정 지원

교육을 공공 서비스로 본다면, 초·중등 교육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은 안정적인 법적 재정 지원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올해 반드시 「직업교육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직업교육의 재정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해법 3]'정주형 유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단순히 학위만 따고 떠나는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라, 지역 산업체에 취업하고 정주하는 '정주형 외국인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부족한 지역 노동력을 보완하는 글로벌 인적 자원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해법 4]현장 밀착형 R&BD를 통한 수익 모델 창출

연구실에 갇힌 R&D가 아니라 현장에서 기술을 완성하는 R&BD를 통해 대학의 자생력을 높여야 합니다. 기업의 기술 난제를 해결하며 얻는 수익이 다시 교육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전문대학은 지역 산업의 심장입니다. 심장에 피(재정)가 돌지 않으면 지역 경제라는 몸 전체가 멈춥니다. 이제는 국가가 「직업교육법」이라는 수혈관을 연결해야 할 때입니다”

5.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구실의 R&D가 논문으로 남는다면, 현장의 R&D인 'R&BD'는 지역 기업의 매출과 일자리

로 직결됩니다.

- 실증 중심의 R&BD 전폭 지원
  지역 중소기업은 스스로 연구소를 운영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전문대학의 우수한 인프라와 슈퍼테크니션들이 기업의 기술적 난제를 함께 해결하는 실증형 R&BD에 교육부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가적 예산을 집중 투여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혁신하여, 지역 산업체의 제품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지산학 협력을 위한 '직업교육 재정 교부금' 신설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려면 일시적인 사업비가 아닌 안정적인 법적 재정이 필요합니다. 올해 반드시 「직업교육법」을 제정하여, 전문대학이 지역 산업의 성장 인프라로서 중장기적인 R&BD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십시오.
- 공동 실습 장비 및 고도화된 인프라 구축 지원
  기업이 단독으로 도입하기 힘든 고가의 AI·디지털 장비를 전문대학이 보유하고, 이를 지역 산업체와 공동 활용하는 '오픈 랩(Open Lab)' 방식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기술의 마침표를 찍는 현장 인력들이 최신 장비로 무장할 때, 지역 산업의 체질 개선이 가속화됩니다.
- R&BD 참여 기업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전문대학과 손잡고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에 힘쓰는 지역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이나 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학-기업-지역'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전문대학의 R&BD는 지역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적 갈증을 풀어주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가 마르면 지역 산업이라는 생태계 전체가 고사하고 맙니다"

6. 아직 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도 많습니다. 이 제도가 어떤 과정이며, 일반대학의 석사과정과는 어떤 점에서 차별화 되는지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전문대학의 교육 단계를 고도화하고 평생직업교육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확대되기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반대학 석사가 이론의 깊이를 더한다면, 전문기술석사는 현장 기술의 '마침표'를 찍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숙련 마이스터로 가는 마지막 사다리입니다.

- 전문기술석사는 직업교육의 완성, '슈퍼테크니션'의 탄생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전문학사에서 학사, 그리고 석사로 이어지는 고등직무교육의 완성 단계입니다. 이는 현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기술자가 이론적 토대 위에 자신의 숙련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슈퍼테크니션(고숙련 마이스터)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 이론적 '논문'이 아닌 '현장 실증(R&BD)'
  일반대학 석사가 새로운 학설이나 이론을 정립하는 데 집중한다면, 전문기술석사는 "현장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실증형 R&BD가 핵심입니다. 학위의 결과물 또한 이론적인 논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공정을 개선하거나,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거나,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 구현해내는 '실질적 산업 성과'로 증명됩니다.

- 지역 산업체 경쟁력을 직접 끌어올리는 인재 양성
  전문기술석사과정의 학생들은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 자신이 몸담은 기업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합니다. 이는 곧 R&BD를 통한 지역 산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직결되며, 대학과 기업이 하나의 기술 공동체로 묶이는 지산학 협력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 프랑스 CFA 모델의 한국형 도입
  이 제도가 안착하려면 프랑스의 CFA(도제교육센터)처럼 기업이 교육 과정 설계와 운영에 깊숙이 참여하고, 정부는 이를 국가적 성장 인프라로 보아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기술석사 학위 취득자가 산업 현장에서 일반 석사 이상의 '기술 전문가'로서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기술이 고도화되는 AI 시대에 현장의 마침표를 찍어줄 고숙련 인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전문기술석사입니다”

7. 올해 전문대교협이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 방향과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올해 전문대교협은 전문대학을 '지역의 성장 인프라'이자 '국가적 교육복지 거점'으로 완전히 각인시키는 전환점을 만들 것입니다.

- 「직업교육법」 제정: 대한민국 직업교육의 독립 선언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의 보조 수단이 아닌, 독자적인 고등직업교육 체계로 인정받기 위한 '직업교육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합니다. 이는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담아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우리 대학들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 R&BD 기반의 RISE 모델 안착: 지역 산업 경쟁력의 견인차
  단순히 인력을 양성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별로 지역 산업의 난제를 해결하는 실증형 R&BD를 본격화하겠습니다. 기업의 기술적 마침표를 찍어주는 슈퍼테크니션을 통해 전문대학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실질적인 주역임을 입증하겠습니다.
- AID(AI+Digital) 전환 가속화: 현장 인력의 역량 증폭
  AI를 대체자가 아닌 강력한 협력자로 활용하는 교육 과정을 전면 확대합니다. 산업 현장의 숙련도를 디지털 기술로 극대화하는 'AID 중점 전문대학' 육성을 통해, 어떤 기술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현장 전문가를 양성할 것입니다.
- '정주형 유학'과 '평생직업교육'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정주형 유학' 모델을 표준화하고,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전직을 돕는 평생직업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며, 전문대학이 수행해야 할 고도의 교육복지입니다.

“전문대학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교육복지의 보루임을 법과 성

과로 증명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8.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전문대학 129개교를 대표해 직업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문대학은 대한민국 산업의 허리이자 지역 소멸을 막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제 국가가 이 '성장 인프라'를 지키기 위해 직접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 「직업교육법」 제정: 국가적 책무의 명문화
  전문대학이 수행하는 고등직업교육은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국민의 삶을 확장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이를 일반대학의 논리가 아닌 직업교육만의 독립된 가치로 보호할 수 있는 「직업교육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해 주십시오. 법적 토대가 튼튼해야 전문대학이 흔들림 없이 국가 산업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 재정 지원: '교육복지' 차원의 투자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시혜적인 예산 배분으로 보지 마십시오. 누구나 원할 때 다시 배워 자립할 수 있게 돕는 평생직업교육은 대한민국이 복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교육복지입니다. 초·중등 교육에 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평생직업교육 특별회계'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R&BD 활성화와 규제 혁신: 학사학위 전공심화정과 전문기술석사의 정원 규제 폐지
  연구실의 이론이 현장의 부가가치로 변하는 실증형 R&BD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십시오. 전문대학이 지역 기업의 기술적 마침표를 찍는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다할 때,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경쟁력의 허리가 튼튼해집니다.
- '실력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
  학벌이 아닌 숙련도와 실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정치권이 앞장서 주십시오. 전문기술석사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슈퍼테크니션들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특성화고부터 석사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직업교육 트랙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 관심을 요청하며, 정부는 '실력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국민역량개발’의 핵심기조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내일을 조립하는 곳입니다. 그 망치질이 멈추지 않도록 정부가 든든한 판을 깔아주시길 희망합니다”